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개최를 앞두고 재원조달 및 경기장 개·보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광주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행안전구역 범위 축소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U대회 3년간 시비 3700억… 재정 악화 우려”

재원 조달책 마련해야-조영표 시의원

조영표(민주·남구 1) 광주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15 광주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대책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U대회 총 사업비는 8171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609억원, 시비 4330억원, U대회 조직위 자체 수입 1232억원이다.

광주U대회 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15억원(국비 417억원, 시비 533억원,

자체수입 65억원)이 투입됐다. 올해에는 1235억원, 2014년엔 3513억원, 2015년엔 2390억원 등 3년간 71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은 올해 550억원, 2014년 2271억원, 2015년 958억원으로, 향후 3년간 투입될 시비는 총 3779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국비지원율을 높이지 않아 경우 대량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어서 재원조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기록하고 있어 U대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U대회 경기시설 가운데 개보수 하기로 계획된 시설은 광주 54개소, 전남 18개소로, 총 72개소에 달하지만, 지난해 문화관광체육부의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예산 반영에 차질을 빚었다”며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내년에는 경기장 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억제하고 현안의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는 오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를 발주해 내년 3월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갯속 북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지역이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3·20 해킹은 북한 소행”

민관군 합동대응팀 “北, 8개월전부터 공격 준비”

지난달 20일 발생한 KBS·MBC·YTN 등 방송사와 농협·신한·제주은행·NH생명보험·NH손해보험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베레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25일과 26일 추가로 발생한 추가 해킹 3건도 모두 북한의 연쇄공격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사이버테러의 공격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북한 내부의 인터넷 주소가 나왔고 접속 흔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 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10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대응팀은 피해 업체의 감염 장

악성코드 76종을 분석하고 수년간 국

가정보원과 군에 축적된 북한의 대남

해킹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런 추정을 내놨다.

공격자는 최소한 8개월 이전부터

목표 기관 내부의 PC나 서버를 장악

해 자료를 절취하고 전산망의 취약점

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침투·감시

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동대

응팀은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28일부터 최

소한 6대의 북한 내부 PC가 1590회

의 접속을 통해 금융기관에 악성코드

를 유포하고 PC에 저장된 자료를 절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공격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백신 등 프로

그램의 중앙배포 서버를 통해 PC 파

괴용 악성코드를 표적기관 내부의

전체 PC에 일괄 유포하거나 서버 저

장자료 삭제 명령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팀은 지난달 20일 방송사·금

융기관·전산장비·파괴뿐만 아니라

다시 뒤 발생한 ‘날씨닥답’ 사이트

를 통한 무차별 악성코드 유포, 지난

달 26일의 14개 대북·보수단체 홈

페이지 자료 삭제와 YTN 계열사 홈

페이지 자료서버 파괴 등도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11일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15개 정부기관 관계자

가 참석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

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로 했다.

/연합뉴스

한 협의도 있다.

검찰은 김종태(73) 전 국민대통합 위 부위원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 무덤에 현화하고 참배하면서도 이승만·박정희 대

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

은 망덕의 인간’이라고 발언해 문 후

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공무원노조 갈등 조짐

노조 흠피에 게재된 도의원 비위 폭로 놓고 공방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의 인사청탁 등 잘못된 행동을 폭로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명예훼손 글”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노조는 “진위 파악 후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자, 의회와 노조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10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과 지난 8일 도청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과장이 커지고 있다. 의회는 더무기 없는 주장이라며 글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노조는 “일부 근거 있는 이야기”라며 거절했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모든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의원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글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네티즌이 올린 이 글들에는 의원들의 이름은 영문 이니셜로 처리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폐지를”

한국신문협회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남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특히 “개정안은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표시광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규제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월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총선 행사에서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확성장치 사용을 금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같은 달

방송 프로그램에 두 차례 출연해 새

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하면

서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 등을 비판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 무덤에 현화하고 참배하면서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인간’이라고 발언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같은 달

방송 프로그램에 두 차례 출연해 새

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하면

서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 등을 비판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 무덤에 현화하고 참배하면서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인간’이라고 발언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같은 달

방송 프로그램에 두 차례 출연해 새

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하면

서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 등을 비판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 무덤에 현화하고 참배하면서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인간’이라고 발언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같은 달

방송 프로그램에 두 차례 출연해 새

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하면

서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 등을 비판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 무덤에 현화하고 참배하면서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인간’이라고 발언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같은 달

방송 프로그램에 두 차례 출연해 새

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하면

서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 등을 비판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 무덤에 현화하고 참배하면서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인간’이라고 발언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같은 달

방송 프로그램에 두 차례 출연해 새

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하면

서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 등을 비판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 무덤에 현화하고 참배하면서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